

‘회고록 파문’에... 대선정국 조기 가열

새누리, 청문회·특검 등 대선까지 활용 장기전 태세 더민주 ‘색깔론’ 규정 미르 등 의혹 규명 국면전환 시도 국민의당, 더민주와 공조 속 사실관계 규명 온도차

안보와 북한 이슈를 고리로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대선정국을 조기 가열시키고 있다.

5년 전인 2012년 대선에서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터지면서 대선정국을 크게 뒤흔들었다. 이는 보수 진영에 결집 효과를 가져다주면서 문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줬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파동도 장기화 될 경우, ‘제2의 NLL’ 논란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과상공세에 나서고 있다.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구성했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요청사건 태스크포스(TF)’를 위원회로 격상하고 내년 12월 대선까지 외교·안보관과 대북정책

검증의 주요 재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검찰 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색깔론 프레임은 경계했다. 무리한 ‘충북몰이’로 비치면 젊은 유권자는 물론 부동층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후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서는 이번 사안을 보다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밝혀 외교 및 남북관계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을 검증하면서 민심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개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정확산을 우려해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이차령 청와대가 공개 대응으로 전환한 것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회고록 내용을 전혀 듣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수석비서관회의까지 연기했다.

반면 더민주의 회고록 파동 자체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면서 국면을 서둘러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의혹 규명 쪽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추미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측근 실세의 비리

덮으려 중북의 종자라도 불일 여지가 생기면 앞뒤 안 가리고 마녀사냥 하는 행태를 목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감을 파행시켜도 막을 수 없고 색깔론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비리의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회고록을 출간한 송 전 장관은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역할을 했고 제18대 국회에서는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비례대표 의원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더민주의 내심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외형상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를 강력 비판하면서도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사실 관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 온도차를 보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먼저 문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확실시 밝혀서 국민의 의문점을 풀고 청와대와 여당도 색깔론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회고록에 묻힐라...野 비선실세특위 출범

더민주 최순실 이슈화 대역공세 강화...국민의당 공조

야권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싶겠지만 국감을 파행시켜도, 색깔론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비리 의혹이 묻힐 수도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의 배후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고 보고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 추미에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낸 것을 거론하며 “친박(친박근혜)을 속 뺀 검찰의 기획·편파 수사가 금방 들롱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국정 농단을 덮으려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치공작의 중심에는 우병우가 자리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우 수석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국감 증언으로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시켰음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무리 미

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관련 의혹을 받고 싶겠지만 국감을 파행시켜도, 색깔론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비리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민주의 이날 전체질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야당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최씨와 관련한 의혹을 계속 파헤치는 동시에 검찰의 ‘야당 표적 수사’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더민주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권력서열 1위는 정유라(최순실의 딸)인 것 같다”며 “정유라를 위해 이해 야당의 학식이 바뀌고,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이 끝나더라도 계속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미르·K스포츠, 최순실·정유라·차은택 등 모든 사건을 반드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특권내려놓기안’ 확정

추진위, 불체포특권 철폐·세비 축소 등 최종안 제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그동안 마련한 특권 개혁안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최종 보고했다.

추진위가 이날 오후 정 의장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입법·특별활동비 등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줄이며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과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 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국회 정치발전특위 가다를 과제로 넘겼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추진위는 이번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임박해 나설 예정이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文 “기억 안난다”

새누리 “국민 우롱하는 처사” 참여정부 김만복·이재정 등 “송민순 회고록 사실과 달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지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소집된 청와대 회의에서 자신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이익공유제 시행 기업을 방문한 직후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솔직히 (청와대 회의 당시의) 기억이 잘 안 난다. 나는 기권을 주장했을 거 같은데, (모두) 다 그렇게 (결의안에) 처음엔 찬성했다고 한다. 모르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당시 남북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인권결의안도 함께 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인권을 중시해서 그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외교부 논리에 좀 넘어갔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논란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에 물어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이익공유 시행기업 ‘디와이’를 방문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에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고 이 과정에 문 전 대표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나오면서 파문이 휘말렸다. /연합뉴스

는지,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밝히지 않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

고록을 두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이미 정부의 입장이 결정됐는데 북측에 물어보는 그런 바보가 어딴느냐”며 송 전 장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

려졌다. 백종전 전 안보실장도 “회고록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정치적 의도로 쓴 글이 아니다”라며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회고록에 쓴 것 그대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떡살’ 한선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국회 경호 경찰관의 떡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18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달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려

의정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떡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 의원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영상과 사진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